“시간선택 교사제, 교육력 약화·비정규직 양산”

시교육감 예비후보·교원단체 반대 성명 잇따라

광주교대 등 전국 교육대 학생들 동맹휴업 반발

시간선택 교사제 도입을 놓고 지난 11일 전국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동맹휴업을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들과 교원단체도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양형일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13일 “시간선택제 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의 연속성을 해치고 교직사회의 협업시스템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정부가 교육계 안팎의 반대에도 일자리창출의 양적 성과에만 집착해 강행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양 예비후보는 “교육은 학생과의 연속적·지속적인 신뢰관계 구축이 전제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스포츠전담강사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시간제 공무원 개념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영국과 독일의 경우 실업난 극복을 위해 시간제 교사를 도입한 결과, 교육력 약화와 저임금 근로자 양산에 따른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제도 자체가 교육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이나 인성지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2일 현 교육감인 장휘국 예비후보도 성명을 내고 “학교 운영에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정규 교원의 정원이 줄어드는 등 교육의 뿌리를 흔드는 정책인데도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전국 교대생들의 동맹휴업을 지지했다.

장 예비후보는 또 “교사가 하루 4시간 근무하면 교과수업·담임수행·생활지도·행정업무 등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며 “정부가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시간선택 교사제는 반드시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도 한 목소리를 냈다.

광주교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시간제 교사는 전체 교원의 헌신과 열정을 약화시켜 학교 교육력 약화를 초래하고 교원의 계약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학생과 하루 종일 함께 생활하며 생활지도·진학상담·학부모상담 등 직무를 맡은 교직의 업무 특성을 간과한 것으로, 교직사회 적용은 매우 비교육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광주교대·전주교대 등 전국 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11일 동맹휴업을 벌였다.

교대련은 성명에서 “시간선택제 교사의 신규 채용은 또 다른 비정규직 교사만 양산할 뿐”이라며 “정부는 전국에 있는 예비교사들의 행동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즉각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흐드러진 캠퍼스 철쭉 대지에 생명력을 전달하는 봄비가 흩날리는 13일 동강대학 운동장을 찾은 한 가족이 흐드러지게 핀 철쭉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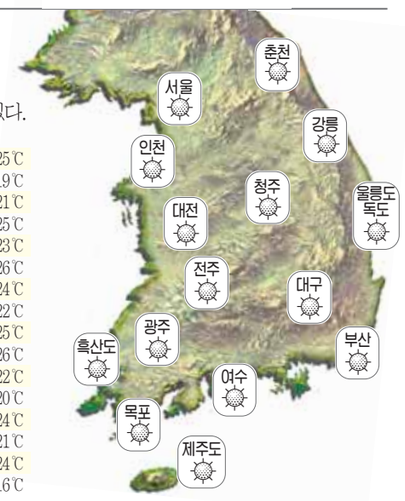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02분 해짐 19시 04분 | 달뜸 18시 07분 달짐 05시 11분

미세먼지 ‘보통’

대체로 맑지만 일교차 크겠다.

광 주	맑음	8/25℃
목 포	맑음	8/19℃
여 수	맑음	10/21℃
나 주	맑음	5/25℃
완 도	맑음	8/23℃
구 례	맑음	3/26℃
강 진	맑음	4/24℃
해 남	맑음	3/22℃
장 흥	맑음	3/25℃
순 천	맑음	8/26℃
영 광	맑음	6/22℃
진 도	맑음	6/20℃
전 주	맑음	6/24℃
군 산	맑음	6/21℃
남 원	맑음	6/24℃
흑산도	맑음	10/16℃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m
먼바다	북~북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먼바다	북~북동	1.5~2.5m

식중독지수	감기지수	뇌졸중지수
주의	높음	보통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m
먼바다	서~북서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먼바다	북~북동	1.0~2.0m

	밀물	썰물
목포	01:28 13:42	06:50 19:03
여수	08:35 20:59	02:26 14:33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5(화)	16(수)	17(목)	18(금)	19(토)	20(일)
날 씨						
최저/최고	8/24	10/24	7/19	14/19	12/19	12/17

허가받은 ‘어린이용 황사 마스크’ 없다

식약처, 주의보

국내에서 어린이용으로 허가받은 황사 마스크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린이용 황사 마스크를 표방한다면 불법 제품인 만큼 사지 말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어린이용 황사 마스크 주의보를 내렸다.

12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금까지 식약처가 허가한 황사 마스크는 14개사 32개 품목이다. 이 가운데 ‘어린이용 황사 마스크’로 허가받은 사항은 없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의약외품 T/F 김미정 과장은 “어린이용이라고 내세우는 황사 마스크가 있다면, 그것은 불법 제품”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미세먼지에 이어 황사가 몰려오는 봄철을 맞아 황사 마스크 수요가 늘면서 불법 황사 마스크가 시중에 나돌자 지난 3월부터 시중 유통 중인 황사 마스크를 거둬들여 품질검사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검사가 끝나는 대로 검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황사 마스크는 일반 마스크와는 달리 입자가 매우 작은 황사와 미세먼지를 걸러낼 수 있도록 식약처가 정한 기준(미세먼지 투과율 20% 미만)을 통과해야만 한다. /연합뉴스

‘바람잘 날 없는’ 조선대 이사회

총동창회장 이사 자격 소송이어 이사 횡령혐의 고소

조선대 이사회가 총동창회장의 이사 자격 관련 법정 소송에 이어, 다른 이사가 횡령 혐의로 고소되는 등 잇단 송사와 고소에 시달리고 있다.

2기 이사회 이사장조차 뽑지 못하고 파행을 빚고 있는데 이사 중 일부가 이번에는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여 조선대 이사회에 대한 학교 안팎의 비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조선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법인 이사회의 A이사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의 전 대표이사 B씨로부터 사문서 위조,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됐다.

B씨는 “A이사와 그 남편이 회삿돈 수억원을 빼내 개인적인 일에 사용했으며, 회사의 인감과 자신의 도장까지 무단으로 날인해 수억원의 지급보증까지 세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이사의 남편도 이 대학 전 이사였는데 2012년 이 대학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주겠다고 업자들을 속여 수억원을 챙겼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사설 ‘해병대 캠프’ 발 못 붙이게

안행부, 부대명칭·마크 등 지재권 192건 등록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설 ‘해병대 캠프’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해병대 부대명칭과 마크 등에 대해 등록 절차를 완료했다.

안전행정부는 해병대 부대명칭·마크·로고에 대한 저작권(174건)과 상표권(18건) 등록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13일 밝혔다.

해병대 명칭·마크 등록은 작년 7월 발생한 사설 해병대캠프의 고교생 사망 사고 이후 마련된 ‘체험캠프 안전대책’에 따른 것이다.

체험캠프 안전대책에는 ▲이동형·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평가 ▲해병대 등 군 관련 명칭 사용금지 등이 들어 있다.

정부는 해병대 지적재산권 등록 외에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주도로 합동단속을 벌여 작년 말까지 9개 업체의 유사 군용물품 27개 품목, 6천765점을 압수했다.

작년 11월부터는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가 시행됐다.

청소년수련시설 대상 종합안전점검·평가 규정을 반영해 개정한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7월 22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안산시 소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방문해 여성가족부·교육부·해양경찰청·경기도의 체험캠프 안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편의점 강도 검거

광주서부경찰은 15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상습적으로 편의점을 턴 혐의(강도)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새벽 5시20분께 광주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 후문 A편의점에서 종업원(22)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23만원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광주·대전 등지에서 수회에 걸쳐 편의점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범행 전 범행 장소를 미리 물색한 뒤 인적이 뜸한 새벽시간대를 골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장소와 주변 등에 설치된 CCTV 화면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A씨를 붙잡았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